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503
----------	-------

발의연월일 : 2023. 1. 17 .

발 의 자 : 박영순 · 양경숙 · 김정호
정태호 · 최종윤 · 조정식
류호정 · 유동수 · 홍영표
이재정 · 이상민 · 김용민
의원(12인)

제안이유

스토킹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톱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스톱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스톱킹 가해자가 스톱킹하던 피해자를 포함한 모녀를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함. 이에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고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시 접근 금지의 대상을 직계 및 동거 가족 까지 확대하여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보호 대상에 피해자의 직계 및 동

거 가족 등을 포함하여 접근 금지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나.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피해자보호명령사건으로 정의하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지방법원으로 함(안 제2조제5호 및 제17조의2 신설).

다.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 등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에게 법원에 출석·귀가 시 동행 등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17조의3 신설).

라.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기간 연장이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음(안 제17조의4 신설).

마. 판사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 결정으로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함(안 제17조의5 신설).

바.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법령위반 등이 있는 경우 피해자, 스토킹행위자 등은 항고할 수 있음(안 제17조의7 신설).

사.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0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스톱킹범죄로 인하여 제17조의3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상대방”을 각각 “상대방 또는 그의 직계 및 동거 가족”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피해자나”를 “피해자 또는 그의 직계 및 동거 가족이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피해자”를 “피해자 또는 그의 직계 및 동거 가족”으로 한다.

제3장을 제4장으로 한다.

제3장(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8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제17조의2(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스톱킹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

제17조의3(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2.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병과할 수 있다.

③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⑤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귀가 시 동행
 2.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
 3.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4.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⑥ 제5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집행방법, 기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4(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의5(임시보호명령) ① 판사는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17조의 3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다.

제17조의6(이행실태의 조사) ① 법원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스토킹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7조의7(항고와 재항고) ① 제17조의3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제17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장의 결정을 포함한다)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제17조의5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피해자, 스토킹행위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② 판사가 피해자보호명령을 기각한 경우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의8(위임규정)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잠정조치”를 “잠정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2. 제17조의3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17조의5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1. ~ 4. (생략) <u><신설></u>	1. ~ 4. (현행과 같음) 5. <u>“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제17조의3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u>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범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 ----- ----- ----- ----- ----- ----- ----- ----- ----- -----.
1. 스토킹행위의 <u>상대방</u> 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1. ----- <u>상대방 또는 그의 직계 및 동거 가족</u> ----

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
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생 략)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
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생 략)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
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
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2. -----상대방 또는
그의 직계 및 동거 가족----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 ① -----

-----.

1. (현행과 같음)

2. 피해자 또는 그의 직계 및
동거 가족이나-----

3. 피해자 또는 그의 직계 및
동거 가족-----

4. (생략)

② ~ ⑤ (생략)

<신설>

<신설>

<신설>

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제17조의2(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스토킹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

제17조의3(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2.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

명령은 병과할 수 있다.

③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⑤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법원

<신 설>

에 출석·귀가 시 동행

2.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
시설 등으로 인도

3.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
적 순찰

4.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
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조치

⑥ 제5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의 집행방법, 기간, 절차,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17조의4(피해자보호명령의 기
간) ①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
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
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
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

<신 설>

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의5(임시보호명령) ① 판사는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17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다.

<신 설>

제17조의6(이행실태의 조사) ① 법원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

<신 설>

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스토킹 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7조의7(항고와 재항고) ① 제17조의3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제17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장의 결정을 포함한다)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제17조의5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피해자, 스토킹 행위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② 판사가 피해자보호명령을 기각한 경우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다. 이

<p><u><신 설></u></p> <p><u>제3장 벌칙</u></p> <p>제20조(<u>잠정조치의 불이행죄</u>)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u><신 설></u></p> <p><u><신 설></u></p>	<p><u>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u></p> <p><u>③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12조 제2항,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u>제17조의8(위임규정)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u></p> <p><u>제4장 벌칙</u></p> <p>제20조(<u>잠정조치 등의 불이행죄</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p> <p>1.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p> <p>2. 제17조의3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17조의5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p>
---	--